

ISSUE & FOCUS

Newsletter 2016-2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응과제

송대성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문제제기

지난 1월 6일 10:30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제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 제4차 핵실험은 첫째,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노력들은 철저히 실패했고 국제사회의 인정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둘째, 제4차 핵실험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군정치는 “북한이 강한 군사력만 보유하게 되면 (1)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고, (2) 북한 정권은 붕괴 없이 옹호될 수 있으며, (3) 북한이 대남·대국제 협상에서 강한 협상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한 군사력의 핵심은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다. 제4차 핵실험을 마친 김정은은 향후 대남 및 대외적인 모든 문제를 오직 핵무기의 협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다급하고 치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했다. 적대국 간에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한쪽은

비핵국인 경우 비핵국은 핵보유국의 인질이 되는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핵보유국이 강한 불량성이나 테러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핵국가의 운명은 마치 무장한 조폭 앞에 벌거벗고 서있는 신세와도 같게 된다. 향후 대한민국은 핵무장까지 한 난폭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상황을 사생결단 극복하여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책임지는 주체는 오직 대한민국이며 그 누구도 그 역무를 대행해 줄 수 없다.

대한민국 생존대책

제4차 북한의 핵실험이후 북한 핵은 (1) 100% 완벽한 핵무기 완성이 안 된 경우와 (2) 100% 완벽한 핵개발이 완료된 경우 등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첫째의 경우 아직 100% 완벽한 핵무기 완성이 안 된 경우는 절대로 100% 완벽한 핵개발완료로 가지 못하게 하는 실효적인 비핵화 노력(Dismantlement)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두 번째인 100% 핵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북한이 개발 완료 한 핵을 우리에게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1) 100% 완벽한 핵무기완성이 안된 경우→실효적인 비핵화 방안 선택과 이행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방안들은 (1) 대화(dialogue) · 외교정책에 의한 방안(diplomacy), (2) 제재(containment·sanction), (3) 타격(strike) · 선제공격(preemption), (4) 비밀작전(covert operation), (5) 북한정권 질적 변화(changing the quality of North Korean regime), (6)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destabilizing the North Korean regime), (7) 남북통일(unification between both Koreas) 등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안은 대화·외교정책에 의한 방안과 실효성 약한 제재에 의한 방안 두 가지였다. 그러나 본 두 방안들은 불량국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효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방안들이었다. 북한은 대화·외교정책을 자기들의 핵개발 정당성 선전과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벌이로 철저히 악용해 왔다. 그리고 북한은 대남 및 국제적인 합의나 협약을 하는 경우 합의와 실천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기에 대화·외교정책에 의한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대북제재 방안은 북한-중국 간 특수 관계와 제재를 가할 각국들과 북한과의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들로 인해 사실상 실효적인 비핵화가 불가능한 방안이다.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또 다시 소극적인 제재 태도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북

한 핵실험이후 지속적인 통화를 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북 핵 해법에 중국이 ‘황금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한구시보)”, “미군전략자산(B-52)의 한반도 전개와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우려를 표한다(한·중국방정책실무회의)”, “명확하되 합당한 대응(疾風知勁草):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 책임회피성 혹은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타격·선제공격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 정교하고 완벽한 킬 체인 시스템(Kill Chain System)을 구비하고, (2) 한국형탄도미사일방어 체계(KMD)를 강화해야 하며, (3) 적시성을 상실치 말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이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없으면 이행할 수 없는 방안이다. 비밀작전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최고통수권자의 과감하고 강력한 신념, 군 지휘관들의 애국심이 동원된 지혜로운 전략·전술, 국제적인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능숙한 외교력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역대 북한 정권은 자기들 정권의 질적 변화 자체를 사실상 ‘북한의 멸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북한 체제 몸통 흔들기 방안은 마치 조폭의 몸통을 계속 공격하면 그 조폭이 악행을 자행할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논리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대북 심리전은 북한 몸통 공격의 극명한 한 예다. 계속적인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북한 체제를 흔들면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만 되면 북핵 문제는 자동 해결된다. 문제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며 통일을 기다리는 동안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상에서 언급한 7가지 방안들은 모두 장·단점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들 방안들 중 실제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사생결단 실천하면서 실효성 있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함이 가장 중요하다.

(2) 100% 완벽한 핵개발이 완료된 경우→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 추구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절대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북한 자체의 멸망을 의미하는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개념을 북한에게 분명히 주지시키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공포의 균형은 제1단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12. 13) 폐기 → 제2단계: 미국의 핵우산 한반도 환원 재배치 → 제3단계: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 → 제4단계: 국제적 핵무기 구매 → 제5단계: 한국 자체적인 핵개발 등의 단계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만 한다.

제1단계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12.13) 폐기

본 선언은 우리가 25년간 북한의 사기놀음에 놀아난 일종의 사기 문서다. 북한은 본 선언을 서명하면서, 그리고 서명한 이후 계속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그들의 핵개발을 해왔다. 남한과 미국은 어리석게 본 선언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기배치하여 놓았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핵개발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한국은 순응하면서 아직도 그 족쇄(足鎖)를 스스로 차고 있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신년 담화에서도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이런 자세로는 북한의 핵 앞에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국가 안보는 성인군자의 인품으로 해결하는 과제가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장군명군하면서 사생결단 되받아치고, 보복하고 하는 것이 국가안보다. 사기 문서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즉각 폐기 선언 해야만 한다. 본 족쇄를 차고서 북핵에 대한 생존책으로서 공포의 균형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

제2단계 : 동맹국 미국 핵우산 한반도 환원 재배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무효화를 선언한 후 즉시 추진할 과제는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에 조속히 환원 재배치하는 일이다. 사기에 의해 훼손된 사항은 사기가 발견되는 즉시 원상회복 시켜야만 한다. 미국의 핵우산 한국 환원 재배치의 긍정적인 점은 ① 북한 핵무기 남한공격 공포·위협에 대한 정당방어 조치, ② 한미 양국의 북한 사기행각 오판에 대한 교정조치, ③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이미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었던 사항 구체적 실천행위, ④ 미국의 핵우산은 실제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북한 핵에 비해 더 신뢰성 있는 핵무기라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제3단계 : 국제적 핵무기 대여

제3단계 조치는 미국이 제2단계 조치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 그 다음 대책이다. 미국의 핵우산 하나에만 대한민국의 생존여부를 맡겨놓고 미국이 거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국가 안보는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 북한 핵에 대한 대한민국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핵무기 국제적 대여 요구는 미국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기존 핵보유국 모두에게 적극 추구해야만 한다. 공포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핵무기이면 그 생산국이 어느 나라든 별 문제될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를 대여하는 방안은 ①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압력 행위다. 미국의 동맹국 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추궁 행위다. ‘한국이 오죽 절박하고 답답하면 핵무기 대여까지 요구하겠는가!’라는 여론 환기에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국 이외 다른 핵보유국에 대여라도 하겠다는 점을 미국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미국의 핵우산 환원 배치는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 ② 북한에 대해 어리석은 핵위협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조치다.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빌려다 놓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보여줌으로서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 ③ 중국에 대한 압박임과 동시에 협조를 얻을 수도 있다. 북한을 비핵화 시키지 못한 중국은 대한민국이 그 생존을 위해 정당방어 차원에서 핵무기를 대여하려고 하니 중국이 협조하는 것이 ‘전략적 파트너’의 협조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 ④ 세계여론에 호소키 위함이다. ‘대한민국이 불량국가 북한의 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 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세계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론이 미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핵우산을 한반도에 환원 재배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정책 변경을 할 수도 있다. ⑤ 한국이 핵보유국들에게 진정성 있게 핵무기 대여를 흥정할 경우 핵무기 보유국들 중에는 정당한 대여료를 받고 대여하여 줄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 국가 안보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국가생존책이다.

제4단계 : 국제적 핵무기 구매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보장키 위해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구매하여 핵보유국이 되는 방안이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이 모두 국산품이면 외제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국산품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무기로서 필요한 기능만 발휘하면 그것이 국산품이든 외제든 상관할 것이 없다. 미국의 핵우산 재배치가 어렵고,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 방안으로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핵보유국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의 국제적 구매가격이 대단히 비쌀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생존여부를 두고 가격을 따질 사항이 아니다.

핵무기 국제적 구매방안은 ① 공개적인 구매가 어려우면 비공개적인 구매라도 좋다. 핵무기 보유국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져 있는 경우 언제 사용한다는 기약 없는 핵무기들을 많이 재고하여놓고 있는 것보다 국제적 핵무기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② 한국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는 북한에 대한 정당방어조치로서, 북한 핵에 대해 남한이 쉽게 굴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조치다. ③ 미국 핵우산 한반도 환원배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맹국 미국이 핵우산을 지원하여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온 지구촌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 판매를 호소하고 있다’는 여론은 미국에게는 괴로운 일이다. ④ 중국에 대한 압력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결과로 한국이 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여론은 중국에게도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다.

제5단계 : 한국 자체 핵 생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여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이다. 본 방안은 앞에서 이야기한 제1~4단계 사항들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추진할 방안이다. 북한이 끝내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북한에게 당당하게 통보하고, 세계를 향해서도 공포한다. 그 동안 인내를 갖고 북

한의 비핵화를 갈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패하였음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연을 당당하게 선포하여야만 한다. 미국에게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미국이 싫어한다면 미국은 핵우산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 한국의 핵 개발노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한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즉시 핵개발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한다.

한국 자체 핵개발 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① 북한의 핵공포·핵위협에 대한 정당방어 조치이며, ② 한국은 핵을 개발할 정도로 경제·산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핵을 양산하고 있는 세계 최강 첨단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④ 중국의 북핵 폐기 노력을 촉구하는 지렛대의 의미가 있고, ⑤ 동북아 핵도미노에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노력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결론

북한이 완전한 핵개발이 아직 미완성인 경우 사생결단 발상을 전환한 실효적인 비핵화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북한 핵이 완성된 경우 대한민국 생존 차원에서 북한 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 정책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발상을 전환한 북한의 비핵화 방안도 그리고 공포의 균형도 미국과 중국은 반대할 것이다.

한국은 이스라엘이나 일본이 미국을 상대하는 외교적인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나 일본은 미국과 어떤 주제를 두고 합의를 우선 모색한다. 국가 안보라는 주제는 포기가 있을 수 없는 주제다. 국가 안보 과제는 어렵다고 포기하고, 쉽다고 실천하고 하는 과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생존’보다 더 고귀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동맹국 혹은 주변국들과 친교라든가, 동맹국들의 동의라든가, ‘핵 없는 세상’이라든가, 국내 여론이라든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대한민국이 생존하여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권이라는 가치에 비교하면 이 모든 주제들은 하위의 개념들이다. 핵보유국 북한 정권에 인질·볼모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은 사생결단하는 강한 결심을 동반한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공포의 균형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만 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